

‘교통거점+문화관광+주거단지’ 모두 갖춘 경제중심지 역할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6개 역세권 개발계획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6개 역세권 개발계획은 환승 등 교통 거점 역할은 물론 비즈니스+문화·관광·스포츠+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등 미래도시를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고있다.

동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기존 역사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춘천시 근화동 춘천역은 역사 주변에 캠프페이지와 연결된 역사광장 및 예술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역사 도로 건너편 수변공간인 춘천도시절단정보산업단지 인근에는 레고랜드와 연계, 수변 녹지공간을 만든다. 근화동주민센터 인근에는 복합 환승과 연계한 중소규모 컨벤션센터와 업무지구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1,733억원으로 책정됐다.

화천역(간동면 간적리)은 역사 내부에 광장도서관을 건립하고 환승터미널을 이 전해 철도와 연계한다. 역사 인근에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창농 스타트 빌리지, 공유주택, 독서캠핑장을 만든다. 화천역세권 개발에는 32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비가 275억원으로 추정되는 양구역(양구읍 하리)에는 스크린 스포츠와 e스포츠 테마파크, 박수근 미술관, 방산자기박물관과 연계한 인문학 마을이 조성돼 즐길 거리 위주로 특화된다.

인제역(북면 원통리)에는 인제의 천혜 자연경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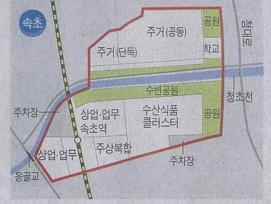
살려 화첩여행을 주제로 한 오픈 스튜디오, 트리카페와 복합 환승센터, 노르웨이 마을(가칭)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백담역(북면 용대리)은 설악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복재관광 지구, 사찰 문화체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종작역인 속초역(노화동)은 역세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사업비(2,625억원)가 투입된다. 이미 관광1번지로 자리매김한 속초에 철도와 횡단, 공항을 잇는 국제복합 환승센터와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구축돼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 리조트형 컨벤션시설, 수도권 및 강원 북부권으로 통근이 가능한 주거단지도 조성돼 개발 수요가 상당할 전망이다.

단 문제는 투자자와 자원 확보다. 이번 영역에서 역세권 조성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지 전매 매수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전제로 추진했다. 춘천, 속초의 경우 도심이라 사업성이 높지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반면 화천 양구 인제 등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개발수요가 적고 시점의 춘천이나 종점인 속초와 달리 경유지역이라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 춘천역** 캠프페이지 연계 역사광장
- 화천역** 환승터미널 이전 철도연계
- 양구역** 인문학마을 즐길거리 특화
- 인제역** 자연경관 활용한 스튜디오
- 백담역** 개발 최소화 목재관광지구
- 속초역** 수도권 통근가능 주거단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회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도시재생 노하우·성과 한눈에 ... 미래도시 엿본 시간여행

도·시·군 홍보부스 '공공분야' 주목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 박람회는 도내 각 지자체들의 역점 사업을 한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구성된 '공공분야'가 운영됐다. 공공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지자체별 중점 SOC 사업으로 떠오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강원도 경제발전의 기반인 '관광산업'으로 정리된다.

■ '도시재생'이 핵심 키워드=강원도 홍보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주거지 지원 형태부터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유형별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쉽게 풀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 등을 함께 선보여 강원도와 시·군의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춘천시 역시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2016년 근화소양 일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부터 2017년 약사평동 일

대 일반근린형, 2019년 조운동 일대 중심시가지형·교통 일대 주거지 지원 사업 등 관내 동별 재생사업의 효과 및 기대감을 세세하게 제공해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동해시는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감성문화 중심의 공동체 만들기 기반인 삼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무릉계곡 등 자연자원과 감홍원의 두타산일기, 삼화사 등 인문자원, 쌍용양회 등 경제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월군 홍보관은 도시재생 스토리에 비중을 실었다. 특히 재생공동체 확산전환형 마을로 특화되고 있는 별총마을을(주거지지원형)과 영월덕포리에서 진행 중인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을 소개했다.

■ 다양한 관광홍보의 장=원주시는 유명 관광지 홍보에 주력했다. 홍보관 배경은 강원감영부터 소금산출렁다리, 비로봉, 다이내믹 맨싱카니발 등 핵심 관광산업으로 꾸며졌다. 원주지역 대표 쌀인 '토토미'에 대한 홍보책자와 원주전통시장 맛집

도 원도십 살리기 등 뉴딜사업 기대효과 쉽게 풀어서 홍보 시·군별 주요 관광지 어필 - 체험시설·특산 먹거리 선보여



◇강원도 홍보관

탐방 책자를 배포하면서 관광객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

강릉시 홍보관은 '12월 강릉, 겨울 바다를 말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강릉 겨울여행에 대한 매력을 어필했다. 지역 특화상품인 강릉커피죽제를 비롯해 강릉국제영화제를 소개했다. 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대한 홍보도 함께했다.

속초시는 강원도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게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나를 설레게 하는 도시 속초'라는 타이틀의 홍보 책자 및 리플릿, 지

도 등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했다.

삼척시 홍보관은 대표 관광지인 삼척해안레일바이크와 해상케이블카로 꾸며졌다. 또 홍보 책자를 통해 1월 하맛이 축제부터 10월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까지 4개월 관광축제를 선보였다.

태백시는 내년 1월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제27회 태백산 눈축제를 널리 알렸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태백선반박물관과 고성대자연사 박물관, 세계 최초 안전체험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도 홍보했다.

■ 줄길 거리 '먹거리도 선보여'=홍천군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 타'임을 강조했다. 각종 레포즈 사진으로 홍보부스를 가득 채웠다. 또 가리산 사이비별 체험장에 대한 소개로 관광객 유입에 힘을 쏟았다.

횡성군은 횡성호, 병지방계곡, 태기산, 횡성한우축제, 안흥전통축제, 정일더미축제 등으로 홍보관을 꾸몄다. 또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 정보 및 기대효과 등을 홍보했다.

평창군은 스키점프대를 비롯한 여행 상품들을 선보였다. 세부적으로 대관령권, 홍석문화마을권, 계방산권, 평창남부권, 오대산권 등으로 나눈 권역별 관광코스를 중점 홍보했다.

평창관광택시 '택시로 한바퀴' 패키지 상품을 소개했다. 정선군은 '정오로 기능길-정선'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관광지 및 먹거리를 홍보했다. 정선의 옛 주거문화를 재현한 아라리촌을 시작으로 정선아리랑길의 구슬픈 가락이 담긴 정선아리랑곡을 강조했다.

철원군은 '철원은 평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생대탐방로 6코스를 품은 철원한여울길, 고성정, 산부연폭포, 직탕폭포 등 철원9경 등을 내세웠다.

■ 한옥·축제·플라이강원 소개=화천군은 한식목공 기능을 양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설치된 화천 한옥학교를 크게 홍보했다. 화천 한옥학교는 전통한옥 건축기술과 전통가구의 연구 발전을 위해 대목·소목 과정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양구군 홍보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먹거리로 홍보관을 꾸몄다. 대표 상품인 양구 편지불명품 건시래기부터 설원 약인, 양구 오대밭, 아카시아 꿀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인제군은 내년 1월18일부터 27일까지 남면 빙어축제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20회 인제빙어축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인제지질공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박인환문학관, 한국시집박물관 등을 소개했다.

고성군은 고성DMZ평화의길, 고성통일전망대, 신선대 등 발거리와 고성라벤더축제, 왕곡마을 등 줄길 거리, 막국수와 툄로 등 먹거리를 홍보했다.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을 중점 홍보했다. 특히 플라이강원 소속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22일 정기편 첫 취항을 예정한 '양양-제주' 노선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윤종현기자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노-사 반응 제각각

고용부 제도기간 부여 등 발표
경영계 “실효성 의문 입법 보완”
노동계 “정착 전에 제도 무력화”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자 강원지역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

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자수 50~299인 기업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제도기간을 주고,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도내 경영계 및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소기업이 대부분인 강원지역 특성상 인력 운용과 직결된 주52시간제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며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

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식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장 예정자는 “6개월 수준의 제도기간이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기초 체력이 떨어진 강원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1년 이상 시행 유예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강원본부장은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정부가 정책 유예를 발표,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고 반발했다. 신호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노동조합 조합장은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여건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소담 kwonsd@kado.net

中企 주52시간 ‘9개월 이상 유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도 상향
일시 업무 증가, 연장근로 가능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외국인 채용 규모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곳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논의 중

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300인 이상 기업에 줬던 기간보다 더 충분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과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준비 있다. 결국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주52시간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한도(B-9)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규정돼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조건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해석기자haeseok@

경제성장 효과 극대화하려면...

“SOC투자 年 44兆~53兆 돼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연간 SOC 투자 규모를 최소 44조7000억원에서 최대 53조4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비율을 연간 2.52~2.6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과급효과 전망’ (주간 국토정책Brief,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을 통해 SOC 투자규모 예측 및 경제·고용부문 과급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원은 전통적 SOC에 대한 정부투자 감축 등을 고려해 2018년 이후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경제적 과급효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각

국토연, 실증적 시뮬레이션 통해 분석

GDP 대비 2.52~2.69% 수준 필요

2017년에 1.28%...‘2배 증액’ 강조

경제과급효과 최대 年 157兆 예상

취업자 수는 76만명 증가 내다봐

확장적 재정·민간투자 활성화 중요

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까지 고려해 적정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적정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GDP 대비 SOC 투자비율 1.28%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매년 SOC 투자규모를 약 44조7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간 약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SOC 투자규모는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과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모두 합쳐도 연간 40조2000억~42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향후 5년간 SOC 투자는 적정 규모 대비 최소 28조9000억원에서 최대 46조9000억원이 부족하다면서,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적정규모의 SOC 투자에 따른 경제·고용 부문 과급효과 전망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까지 SOC 투자를 늘린다면, 경제적 과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6000억원에서 최대 157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한 취업자 수도 연간 약 63만9000명에서 최대 76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봉승권기자skbong@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경제성장 효과 극대화하려면... “SOC투자 年 44兆~53兆 돼야”

연구원은 이를 위해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영향을 강조하고

‘SOC 데이터 연구센터(가칭)’ 설립 및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과급효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SOC 투자가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창

출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 수단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